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6.05.13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, AI 규제법 시행 완화·연기 합의(5.7)

-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, 회원국들이 인공지능 규제법(AI Act) 시행을 완화·연기하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
 - 독립형 고위험 AI(생체인식, 인프라, 교육, 고용, 이민·망명·국경관리 등) 규제 시행 시점은 ‘26년 8월→ ‘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
 - 제품 내장 AI(엘리베이터·장난감 등)의 경우 ‘27년 8월→‘28년 8월로 연기
- 이번 합의는 산업계와 회원국의 규제 부담 완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,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 측면에서 산업용 AI 규제 완화를 적극 요구해왔음

○ 차기 FP10 협상, 난항 예상(5.7)

- 긴축 재정을 선호하는 회원국들과 EU 기관 간 입장 차가 커지며, FP10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. 최대 쟁점은 결국 예산임
- 집행위와 의회는 FP10 확대를 위해 EU 예산 자체를 늘리자는 입장이나,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
- 최종 합의는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옴

○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, ECF의 제한된 예산을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경고(5.7)

- ECF(유럽경쟁력기금)가 지나치게 많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
- 집행위는 기존 14개 프로그램을 통합해 단순화와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나, 유럽의회 내에서는 분야별 예산 유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음
- 엘러 의원은 ECF가 단순 보조금 체계로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, ‘경쟁력’ 개념 정의와 생산성 중심 접근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을 언급

- (기타) ▲FP10, 유럽의 혁신 잠재력을 위해 지역 기반 접근을 강화해야(5.6) ▲EU 회원국 정부들, Erasmus+에서 비EU 국가의 부분 준회원(partial association) 참여 제한 추진(5.6) ▲EARMA 2026,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단순화를 통한 혁신 필요성 제기(5.6)